

문재인 전 대표 극비 전북 방문 관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극비 전북을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문 전 대표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했고 비서진만을 대동했다.

도내 정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문 전 대표는 신홍고등학교 방문, 낙선자들 위로, 김승수 전주시장 면담, 막걸리를 통한 지역민심 소통, 익산 원불교 관계자 면담 등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의 이번 방문은 2017년 대선 등을 앞두고 지역민심을 살피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김종인 대표와의 전략적 제휴 관계가 시한부 체제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대선 앞두고 지역민심 살피기 위한 것 판단 새로운 기반 구축 터닝 포인트 필요 시각도

새로운 기반 구축 터닝 포인트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 시각도 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패배했지만 전북지역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지지 정세가 강하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문 전 대표는 신홍고가 민주항쟁 참여를 기념해 세운 5.27 기념 정자에서 학생회 임원들과 대화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런 계다가 5.18 민주 항쟁에서 전국 최초의 유일무이한 고교생 시위를 펼친 전주 신홍고를 방문해 호남 상징성은 부각시키고 전북 확대론은 불사시키려 한 것으로 점쳐진다.

중략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http://www.nesdc.go.kr>) 참조하면 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런

해석에 대해 경계했다.

전북도당 한 관계자는 "그 어떤 의미도 없고 100% 개인적인 예방 차원이다. 언론에 방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리얼미터 5월 1주차 주간집계(무선 61%, 유선 39% 전국 2,028명)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7.1%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대표를 10%p 가량 앞서며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중략에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 등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http://www.nesdc.go.kr>) 참조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 12.5%p '폭락'

국민의당 지지율이 호남에서 무려 12.5%p나 폭락하는 등 텃밭에서의 지지율 붕괴 현상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이 기관이 2~6일(5일 제외)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2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무선전화(61%)와 유선전화(39%) 병행 임의결기(RDD)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5.8%), 새누리당은 전주 대비 2.0%p 오른 30.4%를 기록, 3주 연속 상승하며 총선 패배 후 처음으로 30%대를 회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대비 0.2%p 오른 27.8%, 국민의당은 전주 대비 3.1%p 하락한 21.8%로 3위를 기록했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지지율 하락 현상은 호남에서의 지지율 붕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당은 광주·전라에서 전주 50.6%에서 12.5%p 폭락한 38.1%를 기록, 더민주(34.5%)와 오차범위(±6.8%p)까지 추격을 허용했다.

여야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가 전주 대비 1.9%p 오른 27.1%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17.2%)를 9.9%p 앞서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문 전 대표는 광주·전라에서 전주(23.3%) 대비 7.3%p 오른 30.6%를 기록, 4주 만에 안 대표(27.2%)를 호남에서 앞섰다.

안 대표는 광주·전라에서 전주(35.9%) 대비 8.7%p 급락한 27.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p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성주 기자

피해자들 "지난 5년 동안 뭘 했는지. 답변 해보라" 분통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첫 회의... 특위 위원들 "죄송하다" 한목소리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국민이 아니다'는 의미로 수수방관하다가 여태까지 왔는데, 정말 묻고싶어요. 그동안 뭘 하셨는지"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첫 회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분노 어린 눈물로 가득했다. 피해자들은 "지난 5년 동안 뭘 했느냐. 답변을 해보라"며 분통을 터뜨렸고, 특위 위원들은 이에 한목소리로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이날 특위 첫 회의에는 20여명의 피해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를 탄 피해자 여성과 코에 산소 공급 줄을 꽂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이들은 모두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이거나 이번 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5년 동안 이 사건을 방치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피해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강 대표는 그러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법 추진 ▲정문회와 국정조사 실시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본부 설치 ▲가해기업의 대국민사과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전날 당정 협의에서 '검찰 조사 후 청문회 검토'를 제안한 것과 관련, "검찰수사를 지켜보고 청문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안된다"며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대책을 전면적으로 주위담에 해결하는 진정한 국무총리실 산하 대책본부를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해기업 사정만을 모두 국회에 불러내 대국민 사과를 받아내 달라. CEO도 한국에 불러서, 정부 측도 불러서 사과를 꼭 받아내 달라"고 덧붙였다.

강 대표 외 다른 피해자들도 그간 정부여당이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외면해 왔다는 점에 대해 눈물을 쏟으며 재발 방지책과 특별법 제정 등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회의에서 양승조 위원장(왼쪽)이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유가족 연대'의 최승운 대표는 "저는 2011년도에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딸을 잃었다. 대부분 그렇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 자식을 4개월 동안 서서히 죽인 것"이라며 "정부는 억울하면 가해기업에게 소송하라고 방치했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까지 우리를 이용하는 사태가 됐다"고 고개를 떨궜다.

최 대표는 "더이상 우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지만 사회적인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3살 아이를 잃었다는 한 중년 여성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속에 담긴 아이의 모습을 보여주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법 안에서 보호받고 싶은 사람이다. 나라에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국민이 아니잖아요"라며 "지금 이 시점부터라

도 저희 좀 도와주세요. 관련 업체들 다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읊소했다.

또다른 피해자 남성은 "똑같은 질문을 더민주에도 드리고 싶다"며 "국회에도 요청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뭘 했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딸아이를 잃었다는 한 유가족은 "5년 기다려다가 5년 속았다"며 "이제 더 안 기다려도 되겠습니까. 한 번만 더 속아 보겠습니다"라며 결국 말을 잇지 못했다.

한 여성은 "치료비만 상당한 금액이 드는 피해자들을 위해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는 임시 전담기구를 설치해달라"며 "당장 급한 피해자들을 우선 살려놓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 위원들은 이 같은 피해자들의 성토에 침뚫힌 표정으로 "죄송하다"고 고개숙이는 한편, 피해자

들의 요구를 최대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 책임자가 피해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보다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면서 함께 해야 하는데 입이 백 개라도 할말이 없다"며 "특별법을 3건이나 냈는데 무산됐다. 늦었지만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자 구제, 배상,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국무총리실에서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도 열자"고 제안했다.

/이성주 기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 체제' 본격 시동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9일 '우상호 원내사령탑 체제'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이와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릴레이 식으로 첫 삼총수도 갖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원내대표단회의를 열고 20대 국회를 앞둔 소감과 원내 현안 운영 기조를 밝힐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20대 국회 원구성을 5월 중에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고 여야에 촉구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원내대표단 발표 회견에서 다음주 초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출마 당시 '당내 화합'과 '원내 제1당의 책임감'을 강조해온 만큼, 이와 관련한 메시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계파간 갈등 양상을 뒤로한 채 정권 교체에 대해 한목소리로 대진하자는 주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는 전날 정부여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 후 청문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과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원구성과 관련한 대야 협상에 대해서는 원내 1당으로 국회의장직을 가져와야 한다는 당위론과 삼임위 증설 방안 등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더민주 원내대책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열린다. 하지만 이번 주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휴가 중인데다 원 구성 등 현안이 쌓여 있기에 회의를 하루 앞당겨 열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첫 회의이기 때문에 당내 문제보다는 대 국민 메시지, 대 정당 메시지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다만 19대 입사국회가 끝날 때까지는 이종걸 현 원내대표가 책임지기 때문에 원내 현안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우선 원구성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우 원내대표는 회의를 주재한 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정의화 국회의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또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와도 만난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와는 지난 5일 회동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 "9일은 상견례이지만 원구성 협상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두 야당이 어떤 공조 스탠스를 취할지 여부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 원내대변인단에 '민경욱 합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변인단에 청와대 대변인 출신 민경욱 당선인을 추가 선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단 상경례 겸 간담회 형식의 첫 회의를 주재하고 원내대표단에 합류한 인사들을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김명연 김정재 원내대변인 외에 민경욱 당선인을 원내대변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재선의 김명연 의원은 수석원내대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오후에 열린 당선인 총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민정일치로 박수로 의결해 달라"며 원내대표단 임명인을 의결했다.

원내대변인에 추가 선임된 민경욱 당선인의 경우, 자타가 공인하는 진박 후보로 공천 당시 유승민계 민경욱 의원을 경선에서 꺾고 공천권을 따냈다.

원내대표단에는 강석진 권석강 김성일 성일종 이만희 이양수 정태욱 최연태 오진환 당선인이 선임됐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 선출 전까지 비박계 홍문표 의원을 사무총장 권한대행으로 내정했다.

/이성주 기자

국민의당, 원내 부대표단 선임

국민의당은 9일 국회정문관에서 원내 부대표단과 원내 대변인단을 발표했다.

원내대변인에는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장정숙(비례대표) 당선인이 임명됐으며, 원내부대표단에는 최경환(기획·광주 북울)·이태규(당무·비례대표)·이용주(법률·전남 여수갑)·김광수(정책·전북 전주갑)·신용현(여성·비례대표) 당선인이 선임됐다"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소 인원이지만 가장 강한 팀워크를 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최대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했다.

그는 또 "정책조정위원회에는 2정조(외통·국방)위원장에게 김종로(비례대표)·3정조(기재·정부)위원장에 채이배(비례대표) 전북 출신 당선인이 선임됐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5조 5269억 확정

본예산 대비 2625억·5% 증가... 3대 핵심과제·SOC 확충·안전전북 구현 등 주안점

전북도 2016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5조 5,269억원으로 확정돼 도의회는 이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추경(안)은 본예산 대비 2,625억원(5%) 증가한 규모로 도정 3대 핵심과제와 대규모 국제대회 개최, 안전전북 구현, SOC 기반구축 및 지방채 감축을 통한 건전 재정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세부적으로는 도정 3대 핵심과제인 탄소산업 및 성장 동력산업 등 경제활력화를 위해 '수출전략형 미래그린상용차 부품기술개발 30억원 등 총 376억원, 산타농정 실현을 위해 바이오 활성소재 육성지원 16

억원 등 총 61억원, 맞춤형 토탈관광서비스를 위해 관광패스통합시스템 개발 및 구축 15억원 등 총 52억원이 증가했다.

또한 지방하천 정비(190억원)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해 총 355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닥터헬기 도입에 33억원이 편성하는 등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 총 123억원이 증액됐다.

이어 2017년 세계태권도 선수권대회와 2023년 챔버리 새만금 유치 등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 및 유치를 위해 총 34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안)으로 도는 불확실한 재정을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방채 215억원을 조기상환해 42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앞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각 상임위원 심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도 황철호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은 한정된 재원으로 도정 핵심과제, 도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과 불확실한 재정여건을 감안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면서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자금을 계획된 사업에 신속히 투입해 계획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이월사업의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수 기자